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범계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4911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3.

발 의 자 : 박범계 · 고용진 · 김경만
김민철 · 김성환 · 김홍걸
박영순 · 양정숙 · 이성만
이수진 · 이장섭 · 장철민
조승래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4차 산업혁명시대 등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, 국내 첨단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, 기존의 생산 효율성 중심의 국제 분업체계가 안전성을 고려해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남에 따라 국내·외 첨단기업의 육성 및 유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.

반면 산업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는 첨단기술 사업의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육성 하기에 한계가 있음.

따라서, 기존에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획입지 내 일부 지역 및 기업수요지에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·유치할 수 있도록 입지 및 기반시설 지원과,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외 첨단기업의 신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기존 계획입지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「첨단투자지구 제

도」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첨단투자지구를 정의하고, 첨단기술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고시하도록 함(안 제2조제8호의3, 제22조의6, 제22조의9).

나. 첨단투자를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·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신성장·원천기술을 수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정의하고,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2조제8호의4).

다. 지정의 근거 및 요건·절차를 마련하고, 첨단투자지구의 유형을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.

1) 첨단투자지구의 유형을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해 지정근거 및 지정·입주요건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(안 제22조의6제1항·제5항).

2) 첨단투자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대하여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22조의6제2항).

3)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고시 및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(안 제22조의6제3항·제5항).

라.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

있도록 함(안 제22조의7제2항).

마.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첨단기업의 유치·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.

1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구 내 입주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지 매입 후 임대 및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8 제1항·제3항·제4항·제5항·제6항).

2) 입주 첨단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법령에 정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신용보증기관 등이 입주 첨단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항·제8항).

3) 첨단투자지구에서 건폐율·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150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8제7항).

바. 첨단기술의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체 등이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, 시험·평가, 검증 및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,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,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10).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8호의3 및 제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3. “첨단투자”란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·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신성장·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서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8의4. “첨단투자지구”란 제8호의3에 따른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

제22조의6부터 제22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6(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 기업에 전용(專用)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(이하 “첨단투자지구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나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
2. 첨단투자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

② 첨단투자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첨단투자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범위
2. 첨단투자지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
3. 첨단투자지구 개발 및 발전계획
4.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
5.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④ 첨단투자지구의 관리는 제2조제15호를 준용하고, 이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그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첨단투자지구가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정된 경우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
2.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관할 시·도지사

⑤ 첨단투자지구의 신청과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7(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) ①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의6을 준용한다. 다만,
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첨단투자지구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첨단투자지구가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2.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첨단투자지구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, 제22조의6제4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지구 내 기업체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8(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

첨단투자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1. 첨단산업 기반시설, 공동연구개발 및 스마트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
2.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
3.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, 의료시설·교육시설·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
4.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첨단투자지구 내 설비투자
5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
6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
7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
8.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사업
9. 그 밖에 첨단투자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사업 등 첨단투자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있거나 첨단투자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4조의2,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40조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

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,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관세·취득세·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「산지관리법」, 「농지법」, 「초지법」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 조성비,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,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제34조제2항과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입분담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따른다.

⑦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

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⑧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.

1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
2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
3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

제22조의9(첨단투자지구위원회) ①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,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둔다.

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고,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국토교통부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정무직 공무원
2. 규제개혁, 첨단산업,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이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·도의 소속 공무원,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1. 첨단투자지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의 지정·변경·지정해제에 관한 사항
3.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의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
4. 첨단투자지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
5. 첨단투자지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
6. 첨단투자지구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
7.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⑤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심의위원회가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

수행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것으로 보며, 그 결과를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사전 심의
2. 첨단투자지구 지정 후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
3.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신청한 규제개선에 관한 실무적 사항
4.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·의결

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10(규제개선의 신청 등) 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체 등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, 시험·평가,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,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,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,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,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.

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,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. 이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
⑦ 제4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 결과,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, 시험·평가,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

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,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2 및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,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 |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8의3. “ <u>첨단투자</u> ”란 <u>첨단기술</u> <u>및 제품의 연구·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신성장·원천</u> <u>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</u> <u>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</u> <u>투자로서 그 범위는 대통령</u> <u>령으로 정한다.</u> 8의4. “ <u>첨단투자지구</u> ”란 제8호 <u>의3에 따른 첨단투자를 촉진</u> <u>하기 위해 제22조의6에 따라</u> <u>지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</u> 제22조의6(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) ①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</u> <u>투자 기업에 전용(專用)으로</u> <u>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</u> <u>다음 각 호의 지역을 첨단투자</u> <u>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</u> <u>단투자지구(이하 “첨단투자지</u> <u>구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1. <u>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</u> <u>지나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</u> <u>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</u> |
| <u><신 설></u> | |
| <u><신 설></u> |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|---|
| | <p><u>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</u></p> <p><u>2. 첨단투자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</u></p> <p><u>② 첨단투자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첨단투자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범위</u></p> <p><u>2. 첨단투자지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</u></p> <p><u>3. 첨단투자지구 개발 및 발전 계획</u></p> <p><u>4.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소요 자원 규모 및 조달방안</u></p> <p><u>5.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u><신설></u></p> | <p>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첨단투자지구의 관리는 제2조제15호를 준용하고, 이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그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1. 첨단투자지구가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정된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</p> <p>2.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관할 시·도지사</p> <p>⑤ 첨단투자지구의 신청과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22조의7(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) ①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의6을 준용한다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|--|
| | <p><u>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첨단투자지구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첨단투자지구가 제22조의6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</u></p> <p><u>2.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<u>3.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첨단투자지구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<u>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/u></p> <p><u>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, 제22조의6제4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지구 내 기업체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22조의8(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서 다음과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첨단산업 기반시설, 공동연구개발 및 스마트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</u></p> <p><u>2.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</u></p> <p><u>3.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|--|
| | <p><u>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, 의료시설·교육시설·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</u></p> <p>4. 「<u>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<u>첨단투자지구 내 설비투자</u></p> <p>5. 「<u>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</u>」 제2조에 따른 <u>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</u></p> <p>6. 「<u>산업기술혁신 촉진법</u>」 제11조에 따른 <u>산업기술개발사업</u></p> <p>7. 「<u>산업기술혁신 촉진법</u>」 제19조에 따른 <u>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</u></p> <p>8. 「<u>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 제17조에 따른 <u>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사업</u></p> <p>9. 그 밖에 <u>첨단투자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사업 등 첨단투자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|---|
| | <p><u>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</u></p> <p>②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있거나 첨단투자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4조의2,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40조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,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관세·취득세·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|---|
| | <p><u>지구</u>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「<u>산지관리법</u>」, 「<u>농지법</u>」, 「<u>초지법</u>」, 「<u>도시교통정비 촉진법</u>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첨단투자지구</u>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,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제34조 제2항과 「<u>국유재산법</u>」, 「<u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</u>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<u>첨단투자지구</u>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. 이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|---|
| | <p><u>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입분담 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따른다.</u></p> <p><u>⑦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첨단 투자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⑧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첨단 투자지구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</u> <u>2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</u> <u>3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</u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<u>제22조의9(첨단투자지구위원회)</u></p> <p>① <u>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,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,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</u></p> <p><u>1. 기획재정부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국토교통부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정무직 공무원</u></p> <p><u>2. 규제개혁, 첨단산업,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</u></p> <p><u>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</u></p> <p>③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|---|
| | <p><u>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이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·도의 소속 공무원,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첨단투자지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</u> <u>2.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의 지정·변경·지정해제에 관한 사항</u> <u>3.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의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</u> <u>4. 첨단투자지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</u> <u>5. 첨단투자지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</u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|--|
| | <p><u>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<u>첨단투자지구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</u></p> <p>7. 그 밖에 <u>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</u></p> <p>⑤ <u>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심의위원회가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것으로 보며, 그 결과를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사전 심의</u></p> <p>2. <u>첨단투자지구 지정 후 신규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신설></p> | <p><u>입주기업에 대한 입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신청한 규제개선에 관한 실무적 사항</u></p> <p>4. <u>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·의결</u></p> <p>⑥ <u>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22조의10(규제개선의 신청 등)</u></p> <p>① <u>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체 등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, 시험·평가,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|---|
| | <p><u>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,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,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, 신청내용에 대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|---|
| | <p><u>한 처리결과, 규제개선 여부를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단투자지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.</u></p> <p><u>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,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. 이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⑦ 제4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위원회의 심의 결과, 첨단기술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|--|
| | <p><u>분야 연구개발, 시험·평가,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,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2 및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 의 심사기준, 절차 및 방법에 관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<u>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|